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2017년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전망과 시사점

목 차

■ 2017년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전망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점검	2
3. 시사점	8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중국경제팀 : 천 용 찬 선 임 연 구 원 (2072-6274, junius73@hri.co.kr)

Executive Summary

<요 약>

■ 개요

35년간 고속성장을 이어오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최근 6%대로 느려지면서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경착륙 우려는 대부분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되나, 기업부실증가, 부동산 버블 확산 등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해 있고, 미국 금리인상, 중국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긴축적인 통화정책 결정이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점검

본 보고서에서는 2017년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경제의 5대 주요 리스크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 첫째, 중국은 대내외의 모순적인 상황에 의해 거시조절 정책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의 긴축적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소비자물가(CPI)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금리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유효하게 스며들지 못하면서 시장의 유동성 위축 우려로 유동성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통화정책 조절시점의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통화정책은 유동성이 일부 개선될 시점에서 일부 금리인상이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최근 중국 부동산 정책이 완화기조에서 급하게 규제기조로 선회하면서 중소규모 도시들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존재한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특대도시의 주택가격은 지난 1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주택가격소득배율이 도쿄, 뉴욕 등을 초과하거나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다. 부동산 버블붕괴를 우려한 중국 당국이 2016년 말부터 부동산정책을 규제기조로 선회하면서 향후 정책 발효과정에서 3, 4선 중소도시의 부동산 재고소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셋째,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면서 기업부문의 부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기업 중 적자기업 비중이 2012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등 기업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중국의 GDP대비 기업부문 부채의 비중은 2008

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현재 168%에 달하는 등 기업부채발 리스크는 향후에도 커질 우려가 있다. **넷째**,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자본유출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위안/달러에 접근하는 등 시장에서 외화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달러화의 유출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중국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를 하회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73 마지노선' 붕괴를 앞두고 있다. **다섯째**, 미중 간 통상마찰 우려가 확대되면서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고용 감소의 원인'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고율 관세 부과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덤핑 관세부과 등 미국의 對中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경우 중국의 대외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경제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중국경제의 구조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착륙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달러강세로 위안화 평가절하 지속뿐 아니라, 미·중 간 금리차 축소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對中 보호무역 압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중·미 간 통상마찰로 대외거래에서 중국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기업부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확대 재정은 공공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정책의 빈번한 변화로 실효성이 저하되어 향후 내수경제의 빠른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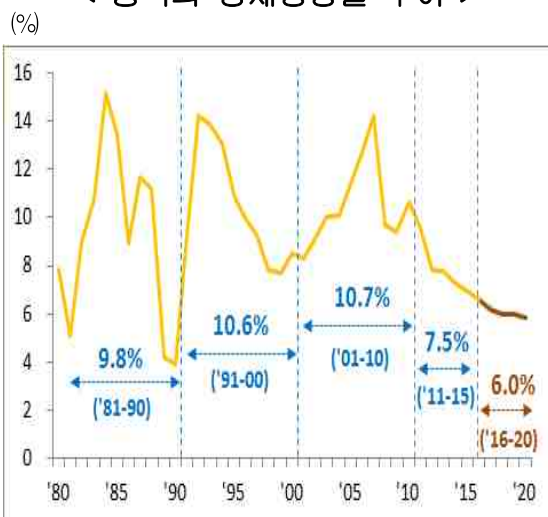
■ 시사점

중국 경제가 유동성 회복 지연, 트럼프노믹스,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미·중 간 통상마찰 환율전쟁 등으로 발생하는 트럼프 탠트럼(Trump tantrum)에 의해 향후 우리의 對中 중간재 수출 급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 경제의 거시조절 정책 실패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급랭 등 돌발 변수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중국의 자본유출 확대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이 지속될 경우, 원화 환율 동조화로 인한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 **넷째**,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등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하여 對中 '수출-투자'의 균형을 이룰 필요성이 있다.

1. 개요

- 2016년 중국 경제는 6%대의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업 부실 증가, 부동산 버블 확산 등 구조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
 - 중국 경제는 6%대로 진입하면서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 중국 경제는 1980~2015년까지 35년간 연평균 9.8%의 고성장을 이어오는 등 양적인 성장을 달성
 - 하지만, 13차 5개년 계획으로 진입한 2016~2020년까지 중국 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6.0%로 느려지면서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 특히, 2016년부터 우려되고 있는 기업 부채 확대, 부동산 버블 확산, 유동성 약화 등 구조적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
 -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2017년 중국 경제 정책 방향은 확대재정 및 중립적 통화정책으로 결정
 - 하지만, 기업부실, 대도시 주택 과열, 유동성 약화 등 구조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美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긴축적 통화 정책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

< 중국의 경제성장을 추이 >



자료 : IMF,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2016~2020년 연평균 GDP 증가율은 IMF 자료로 계산.

< 2017년 중국 경제 정책 방향 >

구분	주요 내용
성장 목표	- 6.5% 좌우(예상치)
거시 조절	- 확대 재정, 중립적 통화 정책
구조 개혁	- 철강, 석탄 과잉생산 해소 지속 - 한계기업 처리 - 3,4선 도시 재고 해소 - 기업 레버리지 축소 - 기업 영업 비용 절감

자료 :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 자료 자체 해석.

2.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점검

① 거시조절 정책 결정의 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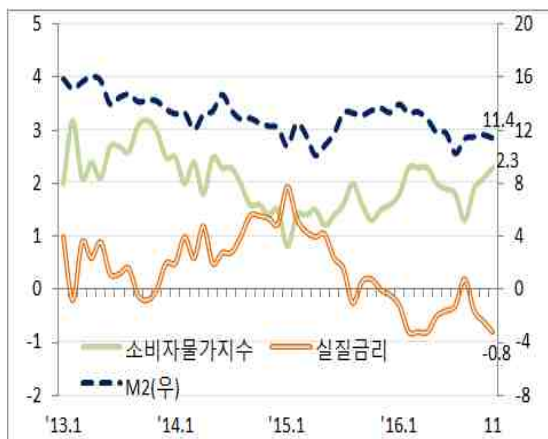
- 미국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의 긴축적 변화가 예상되나, 시장의 유동성 위축 우려로 한편으로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소비자물가(CPI)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의 유동성 개선 지연으로 긴축적 통화정책 결정에 어려움 직면

-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16년 11월 2.3%로 2015년에 비해 소폭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012년 3월부터 4년 6개월간 마이너스가 지속되던 생산자물가지수(PPI)도 2016년 9월부터 플러스로 전환
- 이에 따라 실질금리가 2016년 한 해 동안 마이너스(負)를 나타내고 있어 금리 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 필요
- 다만, 2015년 10월부터 M1 증가율이 M2를 지속 상회하는 등 시장의 유동성 확대가 지연¹⁾

- 따라서, 유동성 개선 전까지는 금리인상 등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꺼내지 않고 재정 확장을 통한 경기부양에 집중할 가능성이 큼

< 중국 금리·물가·유동성 지표 추이 > (%)



자료 : CEIC.
주 : 실질금리 = 명목금리 - 소비자물가지수.

< 중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 (십억 달러) (비중, %)



자료 : CEIC.
주 : 2016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2016년 양회에서 제시한 목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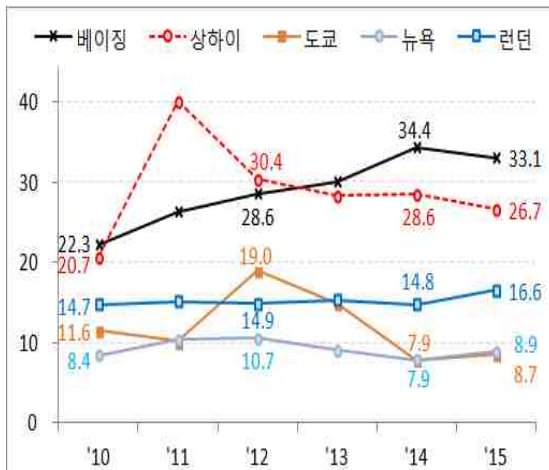
1) 2016년 11월 현재, M1 증가율은 22.6%로 M2 증가율 11.4%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2015년 10월부터 14개월 연속되고 있음.

② 부동산 정책 실효성 부족 우려

○ 최근의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부동산 과열양상은 억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3, 4선 중·소규모 도시는 부동산 재고 소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

- 지난해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과열에 따른 버블 확산 가능성이 커짐
 - 1선 도시 주택가격 증가율은 2015년 8월 10.5% 증가이후 2016년 11월까지 1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가 지속. 2, 3선 도시도 증가세가 지속
 - 베이징, 상하이의 주택가격소득배율(PIR)²⁾이 세계 주요 대도시인 도쿄, 뉴욕, 런던 등을 초과하거나 대등한 수준에 이르는 등 버블 가능성이 확대
- 이에 따라, 2016년 말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3, 4선 도시에서의 재고 소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16년 초 주택담보대출 상한선 완화 등 대폭적인 완화 정책을 시행했으나, 동년 10월에는 주요 도시에 대한 규제로 선회

<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소득배율(PIR) > (배)



자료 : NUMBEO.

주 : 주거주택 평균크기는 90m² 기준이며, 아파트평균가격과 가계소득은 중위수 기준임

< 최근 중국의 부동산 정책 특징 >

구분	주요 내용
완화 정책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주택구매 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한선 75%→80%로 완화 • 주택 2채 이상 보유자에 대한 은행대출 기준 '대출금지'→'은행재량'으로 변경
억제 정책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개발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적으로 강화 • 베이징, 상하이, 선전, 톈진, 쑤저우 등 20여개 주요 도시에서 주택 구입 초기납부금 비율 상향조정 • 상기 도시에서 외지인 주택구입 제한

자료 : 중국국무원.

2) 주택가격소득배율(Price to Income Ratio)은 차입 없이 가계 소득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요되는 기간을 측정하는 비율로, 대표적인 부동산 버블측정 정량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③ 기업부채 리스크 확대 지속

○ 2016년부터 중국정부는 한계기업 퇴출 등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은 적자기업이 계속 증가하면서 기업부문의 부채 리스크는 상승할 전망

-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고 있음

- 이자보상배율은 2000년 2.4배에서 2010년 8.5배로 급증하다 2016년 5.8배로 다소 하락했으나, 비교적 양호한 수준
- 다만, 전체 기업 중 적자기업 비중이 2012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등 기업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지 못함³⁾

- 중국은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전체 GDP대비 기업부채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향후 기업부채 리스크는 커질 전망

- 중국정부는 2016년부터 한계기업 퇴출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2016년 약 168%로 2008년 이후 지속 상승
- 가계 및 정부부채는 2016년 현재 각 41.8%, 45.6%로 비교적 낮으나, 전체 부채는 2013년부터 200%를 넘어서고 있음



자료 : 國家統計局.
주 : 이자보상배율(Interest Coverage Ratio)
= 영업이익 / 이자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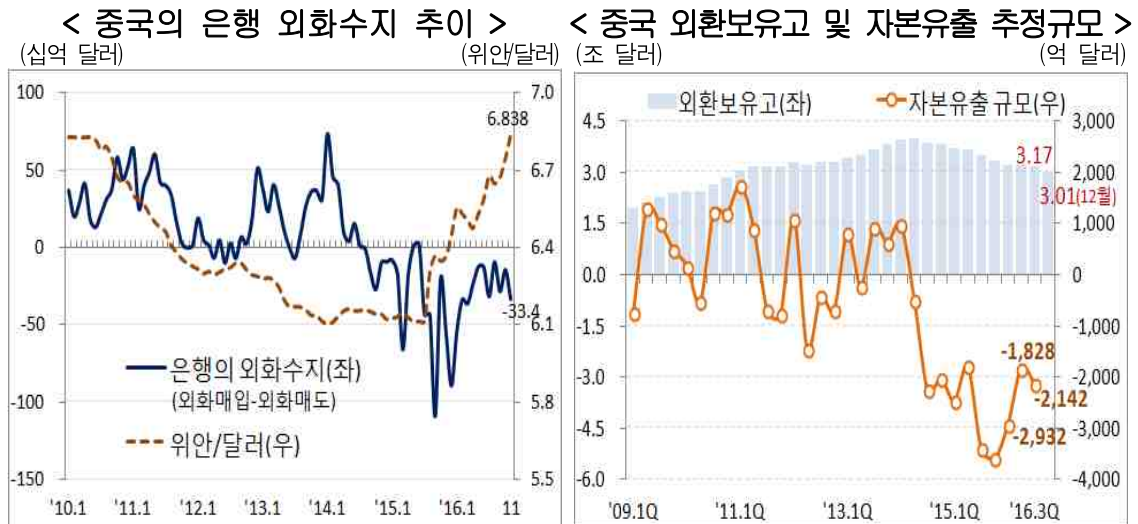


자료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주 : 2016년은 6월말 기준임.

3) 중국국가자산관리위원회(2016년 7월)는 중국 전체 상장사 가운데 좀비기업(영업적자 3년 연속발생)의 비중이 10%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음.

④ 자본 유출 지속 예상

- 위안화 환율시스템 불안정,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위안화 환율 급등과 자본유출이 발생하면서 '7-3 마지노선'4) 붕괴 가능성이 제기됨
- 2015년 8월부터 위안화가 지속 평가절하 되면서 은행의 외화순매도가 지속 증가
 - 중국 정부가 지난 2015년 8월 11일부터 환율 제도를 시장수급을 일부 반영시스템으로 개선하면서 달러 대비 위안 환율은 2016년 12월까지 약 13% 절하함
 - 이로 인해 2016년(11월까지 누적) 은행의 외화순매도는 약 2,90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시장에서 외화수요가 급증
- 이에 따라, 자본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위안화 환율 하락 방어 때문에 중국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 하회 가능성도 있음
 - 2016년에는 3분기까지 6,902억 달러의 자본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수차례 단행 시 미중 간 금리차 축소로 추가적인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음
 - 더욱이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2016년 한 해 동안 약 2,200억 달러가 감소하고 있어 위안화 절하가 지속될 경우 외환보유고는 3조 달러 하회 예상, 단 적정수준5)보다는 클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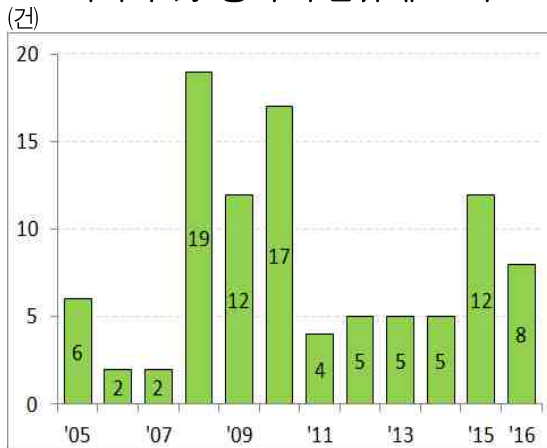
자료 : 國家外匯管理局를 바탕으로 HRI 재가공. 자료 : 中國人民銀行, 海關總署, 商務部 자료를 바탕으로 HRI 추정.
 주 : 자본유출 규모 = 외환보유고 증加分 - 무역흑자 - FDI + ODI.

4) '7-3 마지노선'이란, 중국 위안화 환율 7위안/달러, 외환보유고 3조 달러 선을 의미함.
 5) IMF(2015)가 제시하는 변동환율기준 기법(단기외채x0.3 + 기타외채x0.1 + M2x0.05 + 수출총액x0.05)으로 추산하면 중국 외환보유액 적정수준은 1.53조 달러 이상으로 나타남.

⑤ 미·중 통상마찰로 경제적 손실 불가피

- 미국이 무역적자,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하여 對中 보호무역을 강화할 경우, 중국은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
 - 최근 미국의 對 중국 비관세 조치뿐 아니라,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도 2015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미국의 對 중국 반덤핑, 상계관세 규제는 2008~2010년 사이 급증 이후 2015년부터 재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반덤핑 조치 강화 등을 통해 對中 무역제재를 강화할 경우, 중국의 경제적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고용 감소의 원인으로 인식,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⁶⁾과 45%의 고율 관세 부과 등을 강조
 - 더욱이 반덤핑 관세부과 등 미국의 對中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경우, 중국도 미국 농산물 수입 제한 등 무역 제재뿐 아니라, 중국내 미국 기업에 대한 영업 제재 등 보복조치도 강화될 가능성이 큼

< 미국의 對 중국 수입규제 조치 > < 美中 간 통상 관련 마찰 예상 수단 >



구분	내용
미국 →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율의 관세 부과(최대 45%) • 환율조작국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 활용 - 2016년 발효된 무역촉진법 수정
중국 →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내 미국 기업 영업활동 제재 (반독점법 등) • 미국산 농산물(콩, 옥수수) 수입 제한 • 미국 보잉비행기 구매 취소 • 미국채 매도 가속

자료 : US ITC.

자료 : 내외신 종합.

- 주 1) 최초판정일 기준으로 규제중인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건수.
- 2) 2016년은 10월 31일까지 기준임.

6)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을 통해 교역상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2016년 2월에 발효된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이상이며, 반복적으로 외환개입(GDP 대비 +2%)을 하는 교역상대국에 대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을 통해 자체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⑥ 종합평가

- 중국 경제가 6%대의 비교적 안정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구조개혁 과정에서 거시조절 정책의 어려움, 자본 유출 확대 등 구조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경착륙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최근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달러강세로 위안화 평가절하 지속뿐 아니라, 미·중 간 금리차 축소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짐
 - 2016년 12월 미국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달러 강세로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될 경우, 중국내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외환개입이 빈번해 지면서 외환보유고 3조 위안 하회 가능성이 커질 전망
- 또한, 올해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의 對中 보호무역 압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중·미 간 통상마찰로 대외거래에서 중국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
- 한편, 대내적으로는 기업부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확대 재정은 공공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정책의 빈번한 변화로 실효성이 저하되어 내수경제의 빠른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

< 2017년 중국 경제의 5대 리스크 >

구 분	현황	전망
거시조절 정책 결정의 난제	- 확대적 통화정책 속 유동성 증가 지연 - 확대 재정(GDP 대비 3.0% 초과)	- 유동성 증가 시, 긴축적 금융통화 예상 -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전망
부동산 정책 실효성 저하	-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 버블 심화 - 1,2선 도시 대상 규제 강화 - 3,4선 도시는 규제 완화 유지	-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3,4선 도시 재고 소진도 지연 예상 - 내수 침체 우려도 상존
기업 부채 리스크 지속	- 적자기업 확대 지속 - 기업 세제 부담 완화 추진	- 민간기업 중심의 한계기업 퇴출 - 국영기업은 상호 간 합병 추진
자본유출 지속 예상	- 위안화 13% 절하 (2015.8~2016.12) - 은행의 외화순매도 지속 - 2016년 3분기까지 약 7,000억 달러 유출	- 위안화 평가절하 지속 시 자본유출 확대 지속 예상 - 외환보유액 3조 달러 하회 전망
중·미 통상마찰 격화	- 對中 보호무역 강화 - 비관세 조치(SPS, TBT) & 수입규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모두 증가	- 트럼프 취임 후 對中 보호무역 조치 강화 예상 - 중미간 통상전쟁 격화 우려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정리.

3. 시사점

- 중국 경제가 6%대 성장 속에서 연착륙을 이어오고 있으나, 최근 유동성 개선 지연, 트럼프노믹스,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착륙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
 - 첫째, 미·중 간 통상마찰, 환율전쟁 등으로 발생하는 트럼프 탠트럼(Trump tantrum)⁷⁾에 따라 향후 우리의 對中 중간재 수출 급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
 - 트럼프 취임 후 공약대로 중국제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對中 수출에서 75%에 이르고 있는 중간재, 특히 부품 부문의 타격이 우려
 - 특히, 최근 중국의 마윈 회장(Alibaba)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미국 소기업의 중국 판로를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논의하는 등 보호 무역을 타개하기 위한 대비책을 가동, 우리나라도 對美, 對中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바꿔 보호무역의 돌파구를 미리 찾아야 함
 - 또, 최근 사드배치 등 경제외적 변수로 對中 교역 위축 우려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한중 FTA 채널을 활용한 산업 전반적인 대응 방안 모색도 지속
 - 둘째, 중국 경제의 거시조절 정책 실패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급랭 등 돌발 변수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중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최근 실효성이 저하되면서 자칫 중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 등 중장기적 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에도 대비
 -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미·중 간 금리차 확대에 대해 중국 정부가 금리 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선회할 경우, 자칫 부동산 시장 급랭으로 내수시장 냉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셋째, 중국의 자본유출 확대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이 지속될 경우, 원화 환율 동조화로 인한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뿐 아니라 채권시장 변동에도 대비해야 함

7) 트럼프 탠트럼(Trump tantrum)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및 교역시장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의미의 신조어.

-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지속 평가절하하면, 외환보유고 급감에 따른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우리나라 외환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외환시장 안전판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따른 국내 외국인 자금 이탈에도 대비해야 함
 - 또한, 중국 자본유출이 가속화 될 경우, 국내 채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중국계 자본이 이탈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채 등 주요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부채 수준이 높은 가계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음
- 넷째,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등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2016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SDR 편입 등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기초적 준비를 마치면서 국가 간 송유관, 도로·철도, 물류기지 등 인프라 건설을 본격 시작
 -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일대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건설투자 등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 범위 및 수익 창출 등에 대한 검토를 적극 구상하여 '對 중국 수출-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천용찬 선임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한재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